

전북연구원, 도 10대 정책아젠다 제시

새만금·혁신도시·동부권 3대성장축 연계발전

전북연구원은 2018 지방분권시대와 전라북도 새천년 개막을 전복발전으로 연계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이 선정한 2018 전라북도 10대 정책아젠다'를 이슈브리핑으로 발간했다.

10일 연구원은 문재인정부의 본격적인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비하고 민선6기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전라북도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분야별 10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2018년 10대 아젠다는 ▲지역성장

거점화를 통한 전북발전전략 업그레이드 ▲농업, 농촌, 농민의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전환 ▲전라도 천년, 역사문화 체험여행 일번지로 비상 ▲조용함과, 지능화, 서비스화로 전 북고부가 신사업 육성 ▲새만금에 부는 훈풍(薰風)과 새로운 빛의 만개(滿開) ▲소득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 경제발전 추구 ▲차별없는 지역, 차별화된 지역으로 균형발전 구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사회복지·사회적경제 활

성화 ▲위험을 알고, 줄이고, 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람중심 안심 전북 ▲자치분권으로 내발적역량 강화, 지방선거로 전북비전 실현 계기가 선정됐다.

10대 아젠다 실현을 위한 35개 추진과제는 전북혁신도시 시즌2로 신성장거점육성, 도시재생 뉴딜의 전 북특성화모델 찾기와 일자리 연계, 농민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삼각농정 강화, 4차산업혁명 기술융합을 통한 금융타운 혁신성장 기반구축, 공공주도 매립을 전담하는 새만금 개발공사 전북유치, 2023세계잡버리 준비 및 고군산군도 해양거점화 시

작, 청년활동성을 보장하는 일자리 지원확대, 일자리 연계형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에너지 3020선도를 위한 기반마련, 전북형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강진 원장대행은 "2018 전북 10대 아젠다가 지방분권 시대와 전라북도 새천년 개막을 위한 전라북도 정책의 방향타가 되기를 바라며, 10대 아젠다를 기반으로 전북연구원이 더욱더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향후계획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만들겠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9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밝히고 있다.

떡국으로 사랑나눔 눈길

전북도 자원봉사센터, 신년맞이 어르신 섬김 봉사활동

(사)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는 9일 도노인복지관에서 '신년맞이 어르신 섬김 떡국 나눔'으로 2018년 한해 온정 가득한 봉사활동에 첫 시동을 걸었다.

2018년 신년맞이 어르신을 위한 떡국 나눔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도내 어르신 400여명을 초청, 떡국 나눔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고 공경의 뜻을 전 달하는 자리로 매년 1월 초에 실시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배식에 앞서 초청 어르신과 도내 자원봉사센터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면서 어르신들은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고 대우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한 뒤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을 추진한 김기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도내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이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한 어르신은 "신년을 맞아 지사님께서 직접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들을 만나러 와서 감사드리며 노인들도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이번 주 엄청 춥다

최저기온 영하 20도 전망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당부

전북도는 10일~12일 도내 대부분의 지역이 낮 최고기온도 영하의 날씨가 예상되고, 특히 12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에서 영하 2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한파는 낮 기온도 영하의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기간 장기 출타 계획이 있거나 환파에 취약한 복도식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수도계량기 보존조치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량기함 내부에 현 옷을 채워 외부의 찬 공기 유입을 방지하고 장기간 집을 비울시 수도물을 조금 흐르게 하여 동파에 대비하는 등 수용가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도 관계자는 2017년 11월 15일~2018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동파방지대책을 추진하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휴일 없이 비상상황반을 운영, 동파 발생 시 즉시 관할 시군에 연락하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완주군 공고 제2018-36호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안) 열람공고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다목적 생활체육공원)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완주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
가.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신청의용	위치	면적(㎡)	면적	변경후	권정성립	비고
신설	유진2	체육 시설	생활체육 공원	완주군 유진읍 유진리 일원	-	301,955	301,955	당시	

나. 체육시설 결정사유서

도면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유진2	체육 시설	• 신설 • 위치: 완주군 유진읍 유진리 954번지 일원 - 면적: 301,955㎡	•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맞춤형 다목적 생활체육 공원 조성을 위해 군계획시설(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2. 열람의견제출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열람의견제출장소: 완주군청 도시개발과, 관광체육과, 용진읍사무소
4. 관계도시: 실용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도시개발과(☎063-290-2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0일 완주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

“2015년 위안부합의 재협상 없다”

위안부 합의 검토 TF 결과 보고서

정부, 처리방향·입장 밝혀 “합의 진정한 문제 해결 안돼”

정부는 9일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지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에서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일 양 자치권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면서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처리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과거사 문제와 발전적 협력은 분리해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 모색 ▲생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그러나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과거사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병행 등이다.

강 장관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 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왔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

가 회복되어야 한다. 한·일 양 자치권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로 위안부 문제가 인류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면서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처리 방향과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면서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면서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양국 과거사 문제와 발전적 협력은 분리해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 장관은 발표 마지막 메시지에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바를 모두 충족시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성실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